

한라시론



손 성 민
제주테크노파크 인재경영팀장·경영학박사

지역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지금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도정 핵심사업인 AI·에너지·우주 등 미래 신산업의 확산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영역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조직과 인력 운영은 여전히 과거 전통산업과 사업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적인 미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업에서는 한시적 조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

제주 공공기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준비

면서, 사업 종료 이후 성과 관리와 노하우 축적이 쉽지 않은 구조가 반복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 직급 구조의 불균형, 세대·성별 구성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역시 조직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전반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완화하며, 인사·조직·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기관을 단순히 관리·통제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하

도록 돕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규모의 확대’보다는 ‘운영 방식의 성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업과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획-수행-관리-성가로 이어지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책임과 협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융복합 사업의 경우에도 부서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유연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준비가 요구된다. 정규직 중심의 인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조직의 허리가 되는 중간 직급의 역할을 강화해 사업

기획과 관리 역량이 조직 내부에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재설계, 성별·세대 균형을 고려한 인력 관리, 세대 혼합형 프로젝트 운영과 지식 이전 체계 구축은 개인의 경험을 조직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차분히 점검하고, 사담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출발점이다. 중장기적 시야로 조직과 인력을 바라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지역사회와 도민의 신뢰 속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빠른 변화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준비에서 시작된다.

사설

법 위반 논란 휩싸인 손실보전 협정 ‘도마위’

제주~칭다오 간 항로 취항 과정에서 맺은 손실보전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초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의회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도는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운송물량이 손익분기점을 채우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선사 측에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

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는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는 제주도 항만의 관리·운영 조례 등을 근거로 협정이 진행된 만큼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례에는 해상 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같은 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하기로 했다. 결국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된 이번 협정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행·재정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항로 개설 허가 지연과 인프라 확충 미흡에 이어 법 위반 논란까지 일면서 도의 행정 처리에 대한 도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새겨들어야 한다.

제주 복지 예산 25%… 현장 체감 높아져야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올해 25%를 넘었다. 2조원에 가까운 1조9726억원을 확보하며 복지예산 비중이 25.33%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10.4% 늘어난 수치로 제주도는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민선 8기 공약이 실현된 점을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가 5634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육·청소년 4363억원, 취약 계층 지원 3396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지급 예정인 손주돌봄수당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생활 밀착형 복지 투자로 일

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귀담아들을 목소리도 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제주가치돌봄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에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해온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에서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양적 팽창과 질적 불균형이 병존하는 전형적인 공약 중심 예산 구조”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예산 증가는 긍정적이나 실제 복지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량적 목표 달성에 불과하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에 기대야 하는 구조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복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 복지 예산 25% 시대’에 놓인 과제다.

열린마당

만성질환을 이기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강 동 혁
제주시 보건행정과

중,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요양·돌봄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이면 현재 시범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한 명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고, 본인의 주치의에게 포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예방·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필요도가 높은 12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주시 삼도동, 애월읍, 구좌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총 7곳에서 시행 중이다. 도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부족하다.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인, 보건기관 등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등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향후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도민의 건강지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헌법 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수순”

오 지사, 특검 구형 입장 공유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최후통첩을 구형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상처 받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입장을 공유. 오 지사는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저들의 불법 계엄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독재의 어둠 속에서 헤매을 것”이라며 “생각만으로도 아찔한 역사의 퇴행”이라고 언급. 이어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국민의 눈높이와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민주주의가 견제함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점언. 진선희기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관심

○…3월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반려인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 14일 서귀포시는 이날 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해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설 준비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음식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부 고

김동현(제주대학교) 아버지 나주김공 병석(향년 68세)께서 서거 2026년 1월 13일 21시 46분경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 2026년 1월 16일(금요일)
▶발인일시 : 2026년 1월 17일(토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 양지공원

배우자 이명숙

아들 김동현 며느리 양희주

동욱 이의현

※ 연락처 : 김동현 010-5295-1945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회사는 2026년 1월 6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5일

여업회사법인 제주양식 주식회사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363-26
청산인 양용웅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